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26일 (음력 2월 20일) 화요일

옛 전남도청 5·18 당시 모습 원형복원 된다

도청 본관·본관·회의실·전남경찰국·상무관 등 6개 동

오는 28일 대국민 설명회 개최...사회적 합의 거쳐 확정 예정



구분	주요 내용
1. 도청 본관	·엘라메이터, 화장실 철거 5·18 당시 내부공간 복원(상하실 등)
2. 도청 본관	·외부 3-4층 복원(현 전담 주 출입구, 5·18 당시 내부공간 복원 등 외부 1-2층 전면 소복화)
3. 회의실	·5·18 당시 내부공간 복원
4. 도경찰국	·보강 철골구조체 인형 유지, 5·18 당시로 공간-3층 복원 ·외부 주출입구 복원, 전면 방문자센터 및 후면 철골구조물 철거
5. 전남경찰국 현 회의실	·지붕 및 외부 마감재 복원(기와, 적벽돌 등) ·내부 개관실 등 5·18 당시로 공간-2층 복원
6. 상무관	·5·18 당시 내부공간 복원(역사자료실 등)
연계	·전남 건도청 본관-도청 본관-도청 회의실-도청경찰국 민원실 →도 경찰국 연결통로 복원

옛 전남도청 본관과 전남경찰국 등 6개 건물이 1980년 5·18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된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원형 복원을 전제로 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

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에서 주최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원 기본

계획 연구용역을 맡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복원 기본계획과 향후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원 기본계획안은 80년 5·18 당시의 모습으로 6개동 건물의 원형복원을 기본 전제로 하되 현 건물별 상태와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 여부, 건축법·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을 고려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에 근거하는 복원, 5·18민주화운동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는 복원,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잡았다.

이윤러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원도 기획했다.

복원 대상은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전남경찰국·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동이다.

5·18 당시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자리한 도청 본관 1층 서무과와 수습대책위원회가 있었던 2층 부지사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철거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한다.

도청별관은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



미꾸라지

김학의성범죄 의혹' 중 특수감안형의 공소시효가 남은 2008년 이후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2013년 검경의 피해자 조서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을 통해 확보한 경찰 수사상황 자료를 보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8년 1-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고 이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 윤씨와 김 전 차관이 2008년 3월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나온다.

이 중 B씨 사건은 2013년 수사 때도 경찰이 특수감안형의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건이다. 2명이 공모해 강간했기 때문에 특수감안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감안 형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특수감안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이 사건은 2023년에 공소시효가 끝난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 수사 대상이 된다.

관련 인사의 추배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 사진 = 뉴시스



광주 서구청, 국유지 불법 점유 '미적거리' 빈축

건설과, 2년 전쯤 확인하고도 원상회복 공문만 보내



국유지 불법점유 건축물에 리모델링 작업 중인 모습 / 국유지 불법점유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업 중인 모습

광주 서구청이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건축물을 확인하고도 수 개월 동안 '원상회복' 공문만 보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서구청 건설과는 지난 2017년 6월 광주 시에서 실시한 지적재조사에서 치평동 00-0-45.6등 3필지에 대한 국유지 불법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점유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원상회복 공문만 보내고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00-0-45 등 2필지는 지난해 12월 말경 매매에 의해 소유권 변경이 발생했고 전 소유자 A씨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단점유나 관련 원상회복 통보 3

회한 했을 뿐 어떠한 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00-0-6 점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변상금 280여만원이 지난 2월에 부과됐다.

이런 행정조치가 있는데도 불법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은 공무원과 건물주 간에 유착을 의심하며 의혹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구청 건설과 담당자는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변상금은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 후 조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